

여 “기각” vs 야 “파면”…尹 탄핵 선고일 지정 ‘동상이몽’

“불확실성 해소” 한목소리
국힘 “헌재 판결에 승복”
민주 “파면 외 선택지 없어”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자 국민의힘은 기각을 희망하면서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가 빠른 시일 내 선고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현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현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현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자 현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해왔다.

더 이상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이면에는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현재 선고가 늦어진 이유가 탄핵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빨리

현재가 선고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면서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삼청동 총리 공관 앞에서 한 회견에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나”라는 물음에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발생한 상황이라 파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윤석열 파면”이라며 “현재는 파면 선고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다른 대지에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져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전원 일치로 합의했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며 “민주당이 갖고 있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화에서 “윤석열 파면의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4일 선고에서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온 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마은혁 임명은 침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

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라고도 지적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참석자의 대다수가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조사단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1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가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장에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한정에

의원이 위촉됐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 딸 심모 씨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간 근무한 데 이어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심 총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美 “한국 ‘국방 절충교역’은 무역장벽”

USTR 보고서…한국에 방산무기 기술 이전 요구는 불공정 언급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방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

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아울러 USTR은 한국과 미국이 국제공통평가 기준 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돼 있음에도 한국 국가정보원이 보안평가제도(SES)를 통해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 한국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국정원이 인증한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점 등을 무역장벽으로 거론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에 대해서도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